

“제2국무회의서 지방관계 법령·정책 심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지방소비세·교부세 확충
지방분권 개헌 지속적 협의
윤 시장 “지방 중심 연대해야”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그중 핵심 내용인 ‘제2국무회의’ 신설 운영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6차 총회에서 지방분권회의 주제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장들은 또, 개헌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법률 개정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지방분권개헌 흐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 및 협의회장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의 구성과 모든 지방 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 현 국무회의의 수준으로 하는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내 시도지사들이 26일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제안됐다.

핵심 의제로 내년도 개헌 시 지방분권 강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89조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헌 시 협의회가 주체가 돼 지방분권개헌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나온 가운데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중앙지방협의회’ 또는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운영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지사는 이날 불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신 연대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만들 협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지사는 조직과 인사권에 대

한 지방 이양을 선결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가 조직·인사에서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 사정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법률 개정에 상관없이 조직·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충분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제대로 틀을 잡고 지방분권이 실행되면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해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 매일신문 기자

신삼청교육대 발언 황홍규 부교육감 “공무원도 블랙리스트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보복 행태를 ‘신삼청교육대’로 비유해 비판한 황홍규 부교육감(사진)이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6일 ‘공무원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부교육감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누가 관리하느냐는 확실치 않지만 공무원 가운데 좌파로 몰린 인사들의 명단이 존재했다”며 “나는 청와대 차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초 다른 동료로부터 청와대가 경찰청에 공무원 성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요구해 정보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또 청와대 인사로부터 직접 공무원 성향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과 재직 당시 청와대에 불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된 좌파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임기 보장’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정권에 낙인찍히는 빌미가 됐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일



부 사학 재단에서 나를 좌파로 몰아 쫓아 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황 부교육감은 2009년 1월부터 반강제 고용 휴직을 하고 한양대 초빙교수로 3년 11개월 동안 일하게 됐다.

그는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좌파로 몰아서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을 모두 인사조치했다”며 “나에게는 인사과장이 부르더니 고용휴직을 권고해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학생복지안전관으로 복귀했는데 2013년 11월 어느 날 장관이 부르더니 “나가지마라”고 해서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국장에 대한 인사권한이 청와대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넘어가면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오게 됐다. /이종형기자 golee@

정부 “4대강 ‘유령공원’ 전수조사 후 철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변에 조성된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을 가려내 철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주변에 조성된 297개 ‘친수지구’(66.7km) 전체의 이용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이용도가 적은 곳은 자연상태인 ‘보전지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과거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강 주변 농경지를 정리하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드는 등 357곳의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했다. 이후 예산 삭감과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시설물이 방치되자 국토부는 작년 말 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으로 세분화했다.

보전지구는 자연상태로 두는 곳, 복원지구는 불법 농경지 등을 정리하는 곳,

친수지구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현재 4대강 친수지구에 조성된 친수공원은 181개, 체육공원은 42개, 생태공원은 67개가 있다. 그러나 일부 친수지구의 생태공원과 운동장 등 시설물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면서 ‘유령공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황물이 된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일체 정비에 나선 것이다. 친수지구 정비 작업에는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8개월간 용역을 발인 후 친수구역에서 해제할 곳을 가려내 자연 상태로 복원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친수구역에 대한 이용도 조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보강하되 이용자가 없는 곳은 정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장현 시장 헝가리 출국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기 인수

윤장현 광주지사가 제17회 세계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윤 시장은 30일 오후(현지시간)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대표 자격으로 대회를 인수하고, 2년 후 광주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광주시가 준비한 문화예술공연도 펼쳐진다. ‘물빛, 평화의 물결로’를 주제로 광주만의 차별화된 색채와 정체성을 부각한 무대를 선보인다. 윤 시장은 헝가리에 머무는 동안 부다페스트 시장을 만나 대회 성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대회가 인수 대표단과 함께 부다페스트 문화유산과 수영 경기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윤 시장은 8월 2일 귀국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왼쪽부터 성운모 특허청장, 박경민 해양청장, 최수규 중소기업창업부 차관, 심덕섭 보호처 차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특허청장 성운모·해양청장 박경민·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운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해양경찰청장에 박경민(54) 인천지방경찰청장,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심덕섭(54)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 생겨난 부처이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이날 출범했다.

최수규(행정고시 30회) 중소기업창업부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겸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중소기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박경민(경찰대 1기) 해양경찰청장은 무안 출신으로, 목포고, 경찰대 법학과를 나와 경찰청 대변인과 중앙경찰학교장, 전남지방청장을 역임했다.

심덕섭(행시 30회) 국가보훈처 차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과 전북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을 지냈다.

광주 출신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남여고,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질병예방센터장을 역임했다.

대전 출신의 성운모(행시 32회)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베를린 구상’ 북한 무반응... 적대행위 중지 물 건너가

북한이 우리의 군사회담 제의에 계속 반응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을 기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지’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우리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회담에 응한다 해도 대포단 교란과 회담장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 27일까지는 회담이 열리기 어렵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애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신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직의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